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6.(금) 조간 2023. 1. 5.(목) 12:00	배포 일시	2022. 1. 5.(목)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장	주 철	(044-202-347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2-3473)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

- 장례 복지 및 장사분야 재난 대응에서 국가와 지자체 역할 강화 -

〈중점 추진 과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 로 확대

- ①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 ②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 강화
- ③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 ④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등) 활용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6일(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사정책협의체 운영('21.7~12월),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22.8월),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2.8~10월), 장례 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22.11월) 등을 바탕으로

- 전문가 간담회('22.12월)와 지자체 설명회('22.5월 및 12월), 대국민 공청회('22.12.27)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1차 종합계획('13~'17) 및 2차 종합계획('18~'22)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하여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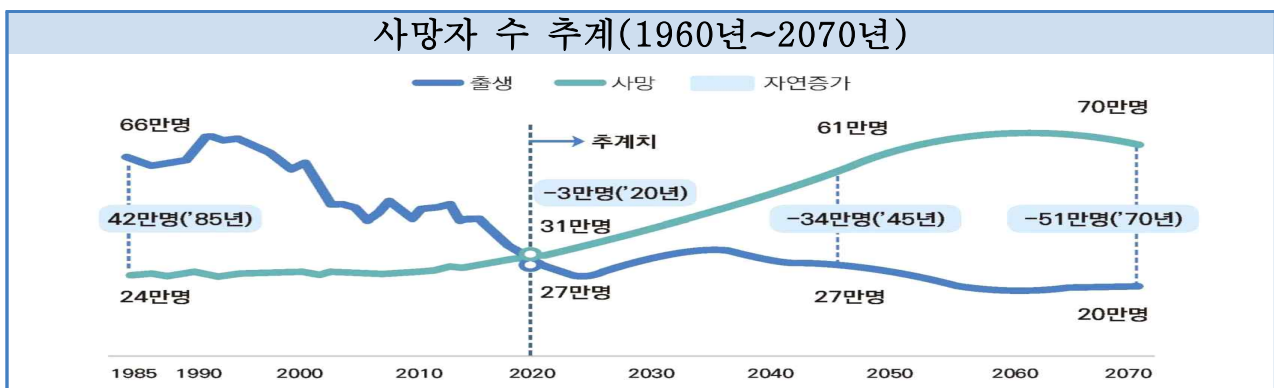
* 화장률 : ('13)76.9% → ('18)86.8% → ('21)90.8% → ('22)91.6%(추계)

<제2차 장사시설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화장시설(공설) 13개소, 화장로 39로 증가로 '22년 공급계획 대비 화장로는 96.7% 공급	56만 1,000구 증가, '22년 공급계획 대비 156.3% 공급	24만 4,000구 증가, '22년 공급계획 대비 103.4% 공급

※ '22년 통계 미확정으로 '21년 수치로 달성률 산출, 자연장지와 봉안시설(봉안당)은 공설·사설(법인·종교단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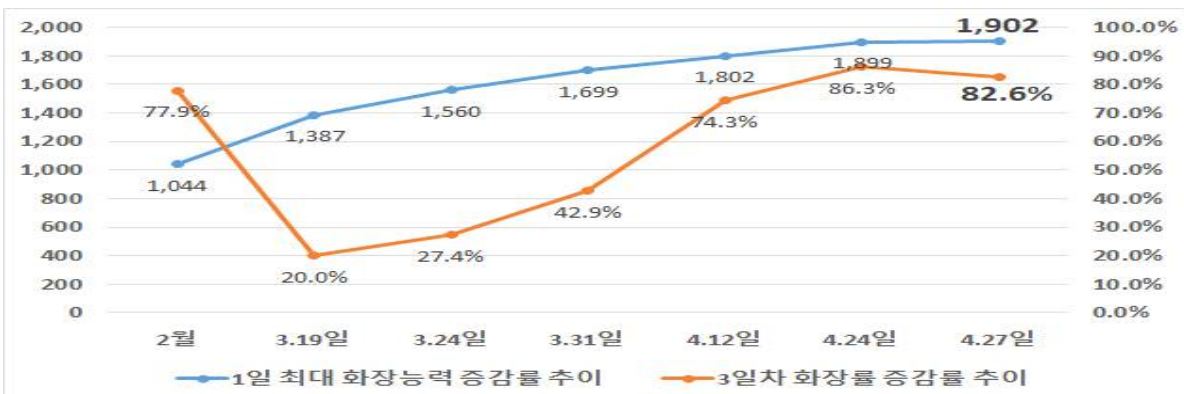
- 또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 하고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20년 대비 2.3배)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1일 화장능력 및 3일차 화장률 추이(2022년 2~4월)



*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1인 가구는 2020년 현재 주된 가구 유형(전체 가구중 31.2%)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4.9%에서 2050년 41.1%로 증가할 전망이다.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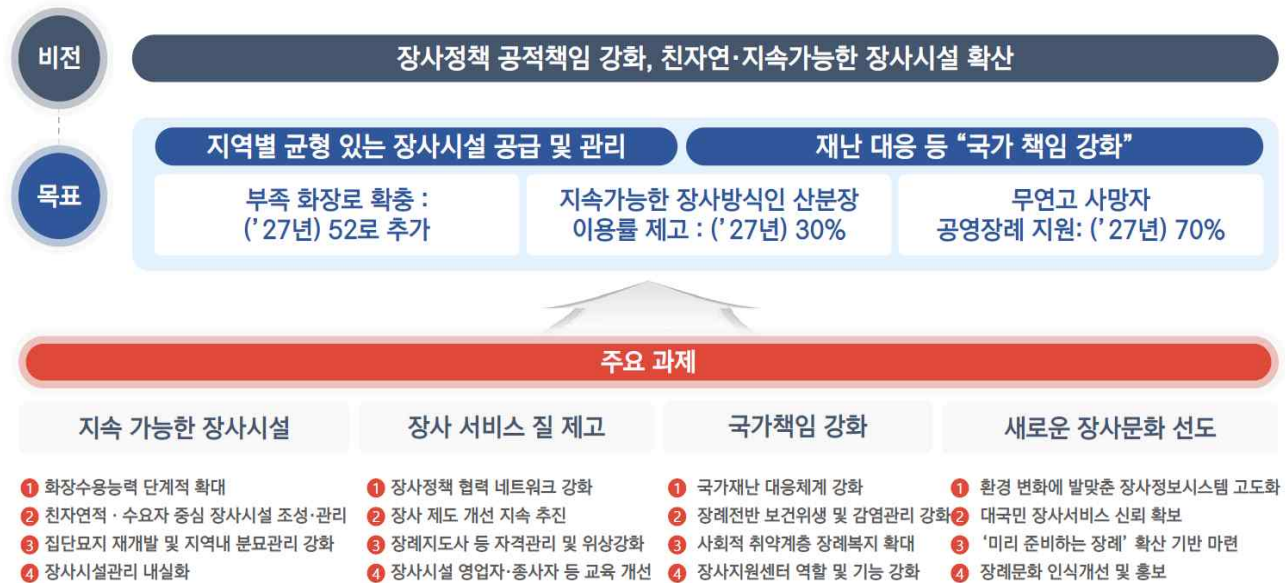
* 무연고 사망자 수 : 1,280명('13년) → 2,008명('17년)→ 3,603명('21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장례비용 등 지원 가능 ('21.12 개정 및 '22.6 시행)

- 아울러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 '웰빙에서 웰다잉(좋은 죽음)'으로 정책 범위 확대, 유족이며 향후 장례 당사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 필요와 함께
- 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가상현실서비스 제공 등) 접목 요구에 발맞춘 장사서비스 개선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그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1]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달성 목표

- 화장로 : '21년 378기 → '27년 430기(52기 증설)
-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하여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지속 추진한다.
 - * 서울·경기 및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밀집되는 대도시 화장로 우선 확대 필요
-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을 검토하고(~'23),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24)한다.

- * 매 화장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현재의 대차식 화장로와 달리, 캐비닛식 (고효율·저비용 유럽·미국식 화장로) 화장로는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 종료후 퇴로로 나온 유골은 별도 냉각·수습

□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 키즈카페, 생활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을 갖춘 장사 시설

** 장사시설 개방 및 투어 행사, 임종·죽음 체험, 문화공연(위령제, 추모 공연, 전시회) 및 영화제 등

-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한다.

달성 목표

- 자연장지 : ' 21년 118만 6,000구 → ' 27년 133만 2,000구(14만 6,000구 추가)
- 봉안시설 : ' 21년 619만 9,000구 → ' 27년 625만 6,000구(5만 7,000구 추가)

○ 장사시설,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25~)한다.

[과제2] 장례서비스 질 제고

□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23~)한다.

□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부여

- 또한,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하여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27)한다.

* 통계청, 「2021 사회조사」('21.11): [선호하는 장례방법] 봉안(34.6%), 자연장(33.0%),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2.3%), 매장(9.4%)

달성 목표

- 산분장 이용률 제고 : (20년) 8.2% → (27년) 30%

※ (해외사례) 스웨덴 우드랜드, “회상의 숲”

- 회상의 숲은 우드랜드 입구 우측에 있는 소나무 숲을 산분 장소로 사용하고, 최상층부에는 헌화장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음. 직원이 도구를 이용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분을 하고, 산분한 후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며, 유가족은 산분 이후 1주일에서 2주일 후 회상의 숲에 방문하여 추모, 겨울에는 지면이 얼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산분 금지



-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 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25~)한다.

* 현행 장사법상 장례지도사 자격교육 : 기본교육(250시간 교육 + 50시간 실습), 자격시험, 의무고용 및 보수교육 없음

- 또한,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25)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25)한다.

* 상조회사 소속 또는 상조회사에서 파견하는 자 및 개인 장의사 등

[과제3] 국가 책임 강화

□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25)한다.
-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25)한다.

* 기존 창고 및 회의실 등 유희공간에 단열시공 후 냉장컴프레서 및 선반 설치하여 재난 등 사망자 급증 시 시신 안치실로 전환·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한다.

달성 목표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21년] 42% → [27년] 70%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확대(~'25)한다.
-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확대(~'23)한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

□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23)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25)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 장사법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위탁사업기관으로 선정,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연장 수행중('16년~)

[과제4]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28)하고 묘지 등 ‘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를 보다 활성화한다.
-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24~)한다.
 -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 도입(~'24)도 검토한다.
 - * (일본 지자체 사례) ‘엔딩 서포트(ending support) 사업’ :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으로 일정 예탁금을 내면 지자체가 사후 장례, 주변 정리, 사망 신고 등 지원
-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24~)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시·도지사·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 <붙임> 1. 비전과 목표
2. 주요 달라지는 점
3. 제1차 및 제2차 종합 계획 및 주요 성과(요약)
4. 장사시설 설치 현황 ('21.12)
5. 전국 화장시설 지도
6.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요약)

붙임 1

비전과 목표

비전	장사정책 공적책임 강화,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목표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 - 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 강화” - 부족 화장로 확충 : (27년) 52로 추가 -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이용률 제고 : (27년) 30% -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27년) 70%

주요 과제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①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②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관리 ③ 집단묘지 재개발 및 지역내 분묘관리 강화 ④ 장사시설관리 내실화
	장사서비스 질 제고	① 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② 장사 제도 개선 지속 추진 ③ 장례지도사 등 자격관리 및 위상강화 ④ 장사시설 영업자·종사자 등 교육 개선
	국가책임 강화	①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 ② 장례전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③ 사회적 취약계층 장례복지 확대 ④ 장사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① 환경 변화에 발맞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② 대국민 장사서비스 신뢰 확보 ③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 ④ 장례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붙임 2

주요 달라지는 점

분야	과제	현재(2022)	개선(2027)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화장수용능력 확대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존재	서울, 경기(특히 동북부지역), 부산, 대구 지역 화장로 확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친자연적 수요자 중심	봉안 67.2%, 자연장 24.5%, 산분 8.2%('20년)	자연장지 이용률 확대(30%) 산분장 이용률(30%)
	집단묘지 재개발	획일적 형태 자연장지 조성	공원형 및 정원형,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
	평가제도 도입	만장된 집단묘지 정비 부진	복합 장사문화시설로 다변화
장례서비스 질 제고	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장사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상설자문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협의·소통 활성화
	장사제도 개선	자연장지 조성규제 합리화 장사서비스 개선	산분장 제도화 및 자연장지 조성 확대, 장사법 전면개정 추진
	장례지도사 인력관리	장례지도사 자격관리 미흡	장례지도사 관리체계 마련 및 위상 강화
	종사자 교육개선	장례식장 인력 교육수행	‘안치 염습을 하는자’ 등 형평성 있는 교육 확대
국가책임 강화	재난대응강화	국가재난장례식장 지정 및 장례지원반 운영	재난대비 장사분야 비상운영체계 마련
	감염관리강화	보건 및 감염 관리 강화 필요	시신 감염정보 연계체계 마련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국가장례지원 사업 실시	취약계층 장례지원 확대
	장사지원센터 역할강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위탁사업 수행기관 역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공공기관 위상 강화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	화장예약서비스 제공 온라인 추모서비스 시작	차세대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 추모서비스 고도화
	대국민 장사서비스	거래명세서 발급 가격정보 등록	가격정보 현행화 및 편리성 확대
	웰다잉 기반마련	중장년층 노년층 위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홍보	장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인식개선 홍보	장사시설 거부감·혐오감 해소 미흡	사전장례의향제도 도입
			기념일·기념주간 행사 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확산

붙임 3

제1차 및 제2차 종합 계획 및 주요 성과요약

1차(2012~2017년)계획	2차(2018년~2022년)계획	주요 성과
화장물 목표치 '11년 71%→'17년 80% 1.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2. 장사시설 환경개선 ① 화장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화장 관련 장사시설 확충 ② 공동체 친화적 종합 장사시설 마련 ③ 노후 시설 리모델링 ④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재개발	화장물 목표치 '18년 86.8% →'22년 90% 1.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①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② 지역 간 공동·복합형 종합장사 시설 설치 확대 ③ 친자연적·수요자 맞춤형 장사 시설 조성 ④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재개발 ⑤ 장사시설 설치 자문단 도입 등 갈등관리 체계 고도화	화장물 목표달성 '21년 화장물 90.8% 1.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 화장문화 정착 ◇ 자연장지 공급률은 156.3% - 자연장지 안치율: '16년 11.0% →'21년 18.4% ◇ 봉안당 공급률 103.4% - 봉안시설 안치율은 '16년 35.8% →'21년 35.0% ◇ 공동·복합형 종합 장사시설설치 확대(남도광역추모공원('19),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21), 울진군립 추모원('21) 등) ◇ 분묘개장 촉진 및 집단묘지 재개발 추진
3. 장사시설 관련 제도 개선 ①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 ②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설치·촉진 방안 ③ 장사시설 폐지 등에 따른 규정 강화	2. 장사관련체계 및 제도 개선 ① 장사정책협의회 구성 및 지역별 수급계획 내실화 ② 장사시설 평가제도 및 수목장립 인증기준 도입 ③ 산분 등 변화된 장사문화 수용 ④ 장사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⑤ 장례지도사 등 장례서비스 관련 인력 운영 개선 ⑥ 장사지원센터 기능 강화	2. 장사관련체계 및 제도 개선 ◇ 장사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장사시설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추진 ◇ 산분 제도화 방안 마련 ◇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장사지원센터 역할 추가 -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 - 장사시설 설치·조성 계획의 자문 갈등관리단 운영
4. 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 해소 ①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조정 절차 도입 ②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③ 지역주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3.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① 장사시설의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②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e하늘장사시스템 고도화 ③ 장사시설의 관리기준 내실화 ④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⑤ 무연고 사망자·위안부피해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3.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개선 ◇ 장사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계약체결 전 설명의무부과 ◇ e하늘장사시스템 고도화 (화장예약 모바일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처리정보 등록, 비대면 온라인 추모서비스 제공) ◇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확대 지정 및 운영 ('19년 195개소 → '21년 200개소) ◇ 국립 망향의 동산 내 위안부 피해자 별도 묘역조성 및 추모비 건립('18.상)
5. 국민인식개선 강화 ① 장사문화·장사시설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② 홍보 대상의 다양화 및 홍보채널의 다각화 ③ 모범적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통한 친화도 제고 ④ 장사관련 종합정보사이트 「e-하늘 장사정보」 활용 접근성 제고 ⑤ 장사문화진흥원(특수법인) 설립 추진	4. 국민인식 개선 ①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 조성 ② 웰다잉 장례문화 확산 ③ 친자연적 장례문화 대국민 홍보 강화	4. 국민인식 개선 ◇ 화장시설 인식개선 미리 준비하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이별준비' 캠페인 추진 ◇ 홍보대상을 기존 노년층에서 2030세대까지로 확대하여 장례문화 관심 확산 유도

붙임 4

장사시설 설치 현황(' 21.12)

○ 화장시설

구 분	화장시설(개소)			화장로(기)		
	계	수도권	지 방	계	수도권	지 방
	62	7	55	378	102	276

○ 자연장지, 봉안시설, 집단묘지

* 사설은 법인 및 종교단체 시설만 포함

구 분		개소수	가능 구수(천 구)			안치율 (b/a)(%)
			안치능력(a)	기 안치수(b)	잔여분	
총계		1,240	9,646	3,819	5,825	39.6
자연 장지	합 계	164	1,186	218	967	18.4
	공 설	70	637	155	482	24.4
	사 설	94	548	62	485	11.4
봉안 시설	합 계	576	6,199	2,168	4,030	35.0
	공 설	192	1,945	1,186	759	61.0
	사 설	384	4,254	982	3,271	23.1
집단 묘지	합 계	500	2,261	1,433	828	63.4
	공 설	332	673	478	195	71.0
	법 인	168	1,588	955	632	60.2

○ 장례식장

개소수	빈소수	안치능력(구)	공설·사설 구분		종류	
			공설	사설	전문	병원
1,107	5,055	8,660	76	1,031	485	622

붙임 5

전국 화장시설 지도



※ 같은 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인접 화장시설에서 관내 화장 가능지역, 색이 없는 지역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관외 화장을 해야하는 지역

붙임 6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요약)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
- (조사방법)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 (조사기간) 2022.10월
- (조사기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한국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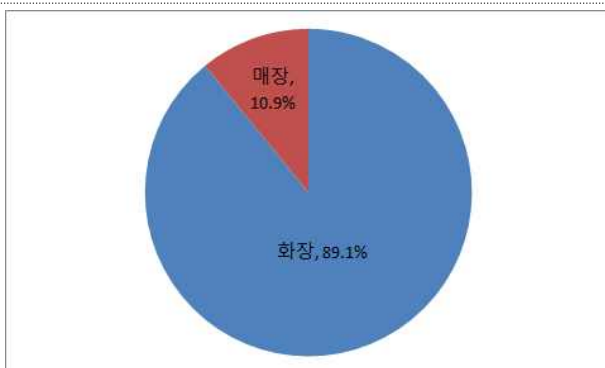
□ 주요 조사 결과

- (희망하는 장사방법) 화장 89.1%, 매장 10.9%
 - 화장을 희망하는 1,354명을 대상으로 희망 이유*를 질문한 결과, ‘후손(자식)에 대한 배려’ (65.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 ‘화장 문화가 정착되어서’ (43.4%), ‘장례절차의 간편성’ (43.0%),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40.6%), ‘자연훼손이 걱정되어서’ (27.4%), ‘장례비용이 저렴해서’ (13.4%)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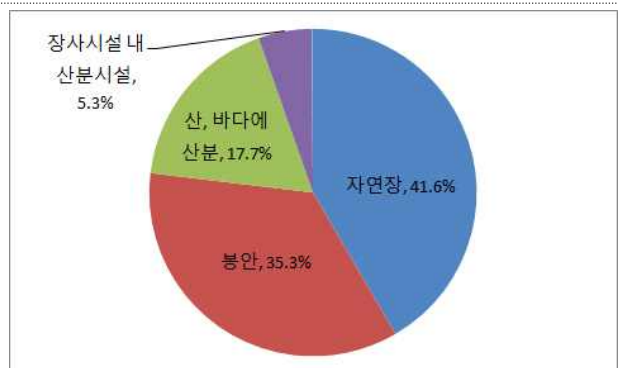
* 최대 3개까지 응답

- (화장 후 희망 안치방법) 자연장 41.6%, 봉안 35.3%, 산분 23% (산 또는 바다에 산분 17.7%, 화장시설 내 유족동산에 산분 5.3%)

〈 희망 장사방법,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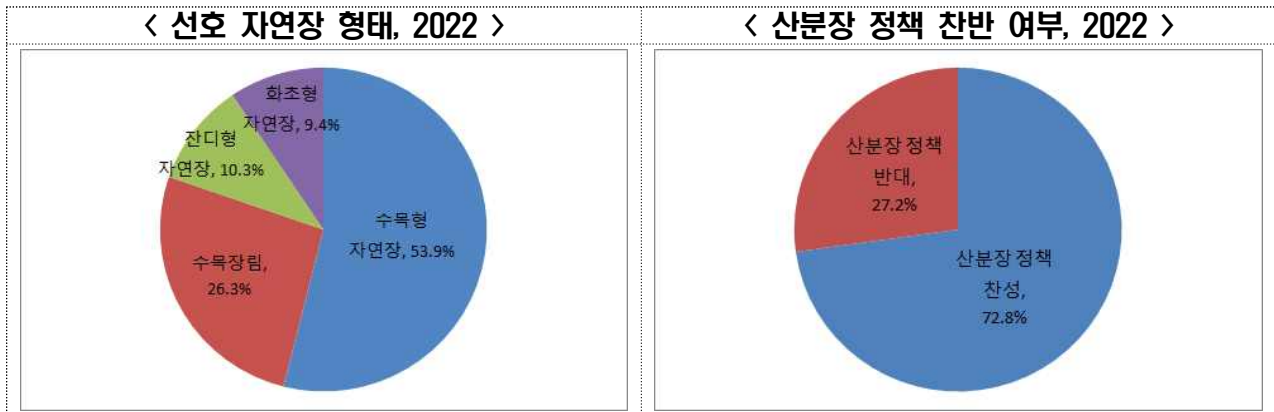


〈 화장 후 희망 안치방법, 2022 〉



- 자연장을 희망하는 562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자연장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수목형 자연장’ (53.9%), ‘수목장림’ (26.3%), ‘잔디형 자연장’ (10.3%), ‘화초형 자연장’ (9.4%)으로 응답

○ (장사정책) 산분장 정책에 대해 찬성 72.8%, 반대 27.2%



-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 66.8%(매우 찬성 15.7%, 찬성 51.1%), ‘보통’ (29.3%), ‘반대’ (3.5%), ‘매우 반대’ (0.4%)

* 사전장례의향서 : 생전에 장례방식, 장례서비스, 장례용품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사전장례계획 운영하는 것

- 생전(生前) 가족들과의 죽음 및 장례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90.9%

-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례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 61.8% (매우 필요하다 18.3%, 필요하다 43.5%), ‘보통’ (28.5%), ‘필요하지 않다’ (8.3%), ‘전혀 필요하지 않다’ (1.4%)

- 장례식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입장 43.9% (매우 그렇다 9.5%, 그렇다 34.4%), ‘보통’ (31.3%), ‘그렇지 않다’ (19.3%), ‘전혀 그렇지 않다’ (5.5%)

- 장사시설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 65.2% (매우 동의한다 24.8%, 동의한다 40.4%), ‘보통’ (21.8%), ‘동의하지 않는다’ (11.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